

# 서해지방해양경찰청 「종합감사」 결과 보고

- ❖ 해양경찰청의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·효율적으로 연계·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청에서 해당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지 등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보고

## I 감사 개요

- (기 간) '19. 7. 8.(월) ~ 7. 19.(금), 10일간
- (대 상) 서해지방해양경찰청(소속기관포함)
- (감사범위) '15. 10월 ~ '19. 6월 기간 중 추진업무 전반
- (감 사 단) 감사담당관 등 7명

## II 감사 중점 분야

- |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|--|
| 구조안전<br>분 야  | - 수색구조 상황대응 및 활동(구조조정 본부)의 적정성<br>- 다중이용선박(유·도선, 낚시어선, 레저 등) 안전관리 이행실태 등       |
| 경 비<br>분 야   | - 상황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이행실태<br>- VTS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활동의 적정성 등                 |
| 수사정보<br>분 야  | -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기본원칙 준수 실태<br>- 통합방위기관 간 공조체계 및 안보교육 실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양오염<br>방제분야 | - 해양오염사고 대비·대응 태세의 적정성<br>- 해양오염사고 포상금 예산집행 및 분석실 운영의 적절성 등                    |
| 행정지원<br>분 야  | - 기능별 조직·인력·예산·장비 등 운영의 적법성, 타당성<br>- 근무상황 등 복무 관리 실태<br>- 소극행정 혁파 및 적극행정 장려 등 |

번호	구 분	주요 내용	처 분
1. 처분 요구 사항			
1	수색구조	<p>■ 소형함정 대상 현장조정관(OSC) 임무·역할 재정립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각종 해양사고 발생 시 소수인력의 한계를 가진 소형함정(P정~100톤급)이 사고현장에 최초로 도착하여 현장조정관(이하 OSC : On-Scene Coordinator)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, 해양수색구조지침서에는 소형함정의 OSC 임무·역할 등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</li> <li>- 또한, 해상종합훈련에서도 다수인명구조 등 해양사고를 대비한 OSC 임무는 중·대형 함정에 편중, 소형함정 대상 OSC 임무 훈련이 없음</li> <li>- 따라서 ①소수인력으로 구성된 소형함정에 특화된 OSC 임무 및 상황별 현장 체크리스트 구체화, ②해상종합훈련 중 소형함정의 초기 OSC 임무 훈련을 포함하여 종합훈련 강화 필요(훈련교범 정비 포함)</li> </ul>	권고 (본청)
2	경 비	<p>■ 해양경찰 비상연락망 지정 기준 마련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『해양경찰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』 제14조에 따라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전화번호 작성서식은 1, 2차 란으로 되어 있음</li> <li>- 그러나 1, 2차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불명확한 관계로 일부 비상연락망의 경우는 1, 2차 모두 본인 휴대폰번호만 기재하거나, 2차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는 등 통일된 비상연락망 작성기준이 없음</li> <li>※ 휴대폰 고장, 통신망 장애(기지국 파손) 등 사유 발생 시 비상상황 대처 곤란</li> <li>- 따라서 각종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연락망의 전화번호 지정기준 마련 필요</li> </ul>	권고 (본청)
3	해양안전	<p>■ 유도선 사업면허(신고) 관리대장 및 면허(신고)번호 발급 기준 마련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『유선 및 도선사업법』에 따라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증을 발급·재발급하고 있으나, 사업면허, 신고사항을 기록·관리하는 대장 및 사업면허(신고)번호를 부여하는 기준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경찰서별로 관리방식이 상이함</li> <li>- 따라서, 유·도선 사업면허(신고)와 관련된 통일된 관리대장 서식 및 사업면허(신고)번호 발급 기준 마련 필요</li> </ul>	권고 (본청)

번호	구 분	주요 내용	처 분
4	예산회계	<b>■ 회계연도말 정부구매카드 임의적 사용기한 설정 부적정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부구매카드는 관서운영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365일 연중 사용 가능하며, 해당 회계연도 중 사용한 정부구매카드 대금은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, 일선관서에서는 회계결산을 사유로 매년 12월 중 정부구매카드 사용기한을 임의로 설정</li> <li>- 특히 함정·파출소 등 일선 현장부서에서 정부구매카드 사용중지를 사유로 회계연도말 유류비 및 수용비 등 관서운영경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할 가능성 상존</li> </ul>	통보 (본청) (서해청)
5	예산회계	<b>■ 해상교통관제센터 예산집행 방식 개선 필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마그네트론 등 각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방청(교통관제계)에서 통합구매방식으로 예산집행 방식을 개선하여 예산절감 및 물품 품질 상승 효과 거양 필요</li> </ul> ※ 서해청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현황(총 6개소) √ 진도·여수(연안VTS 2개소), 여수·완도·목포·군산(항만VTS 4개소)	권고 (서해청)
6	수 사	<b>■ 디지털 증거의 수집·분석 및 관리 규정 마련 필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디지털 증거의 수집·운반·분석·보관 등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 및 실체적 진실 발견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</li> </ul>	권고 (본청)
7	수 사	<b>■ 수사이의사건 처리 부적정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사이의*를 내용으로 한 민원은 「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, 수사이의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사례가 없음</li> </ul> * 유형 : 부당한 접수처리, 수사절차 미 준수, 사건처리 지연, 인권침해 등	통보 (서해청)
8	해양오염	<b>■ 해양오염물질 분석요원의 보직기준 마련 필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양오염물질 분석의 전문성을 위해 분석경력, 분석 전문교육 이수여부, 관련 학위·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분석요원 보직기준 마련 필요</li> </ul>	권고 (본청)
<b>2. 모범사례</b>			
1	해양오염	<b>■ 대국민 소통을 위한 기름 전시실 및 체험장 조성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방제기자재 견학 프로그램 운영, 방제체험 공간마련 등으로 초·중·고 학생 참여자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내어 해양경찰과 방제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대국민 소통을 강화함</li> </ul>	